울산단지 정전 피해 377억원 상회

울산시-상공회의소, 정부에 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재차 건의

울산 미포-온산 국가공단의 <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> 지정 여부가 지역 경제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.

울산시는 석유, 자동차,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을 포함한 5만9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울산 미포-온산 국가공단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사고로 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<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> 지정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하고 검토결과를 회신해 주도록 요청했다.

이와 함께 태풍재해에 대비해 특별관리지역의 송전탑 설계기준을 풍속 초당 50m에서 70m로 강화해 줄 것과 송전선로 루프화 등을 통해 특별관리지역 대체송전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도 건의했다.

또 국가 기간산업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울산지역 노후 송전탑 등의 우선교체와 한전 지중화 사업의 조속 완결, 석유화학기업 등 정전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송전선 복선화 적극 검토 및 기업의 자체 발전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필요자금과 연료부문 세제지원 등도 요구했다.

울산의 2002년 전력 사용량은 1882만4677MWh로 전국의 6.7%를 차지했으며, 2003년 7월 현재는 전국의 6.6%인 1133만5168MWh로 집계됐다.

또 제14호 태풍 <매미>로 인한 정전사고로 28사 325억원의 잠정 피해가 발생했으며, 피해 사례로는 SK의 40여개 공정 중 6개 공정 정지에 따른 60억원과 S-Oil의 1일 전공정 가동중지로 인한 100억원을 비롯해 울산 석유화학단지 17사에 정전과 스팀공급 중단에 따른 75억원 등이었다.

한편, 울산상공회의소도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정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등이 밝혀지는 다음 주 중 <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> 지정을 정부 측에 건의할 계획이라 정부와 한전 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

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, 최근 태풍 <매미>로 울산-온산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기업의 총 피해액 589억 9710만원(197사) 가운데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64%인 376억9200만원(24사)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대기업 16사 343억3300만원(대기업 전체의 74.5%), 중소기업 8사 33억5900만원(73.9%)이다.

이에 따라 지역 기업들은 중화학산업단지에서는 전압 강하나 순간 정전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, 자사의 과실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정전, 전압강하, 순간정전 등에 대해서는 <정전피해 보상법>을 제정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.

울산 지역은 1999년 5월20일 울산화력과 용연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에 이물질이 끼면서 전압이 크게 떨어져 생산라인 속의 제품이 모두 응고돼 20개 기업에서 2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정전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.

한편,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999년 큰 피해가 났을 때 <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> 제도 도입과 <정전피해 보상법>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산업계의 뜻에 따라 곧 청와대와 정부, 국회 등에 건의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22>